

# 해외매출 3000억 넘어선 '트로이카' K-푸드 열풍 이끈다

〈신라면·비비고·초코파이〉

신라면, 매운맛으로 '식품 외교관' 비비고, 해외매출 7000억 목표 초코파이, 해외 현지화 마케팅 성공



(왼쪽부터) 미국 신라면 /농심 미국 비비고 미니 완탕 /CJ제일제당 초코파이 글로벌 제품 /오리온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비비고 만두와 초코파이, 신라면이 해외 매출 3000억원을 넘어섰다.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면서 내수 시장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는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신라면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각각 3420억원, 3320억원, 31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각각 42.5%, 9%, 17% 증가했다.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의 해외 매출은 2015년 1240억원, 2016년 1660억원, 2017년 2400억원, 2018년 34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650억원 매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매출은 2400억원으로, 2016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규모를 키웠다. 중국 매출도 2015년 70억원에서 2018년 500억원으로 급상승했다. 베트남 매출은 지난해 매출은 200억원대를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현지화와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려 내년에는 비비고 만두의 전체 매출 1조원, 해외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심 신라면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미국 월마트 전 점포에 신라면을 공급한 이후, 코스트코, 크로거 등 메인 유통사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와 대도시 중심의

판매를 늘렸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판매를 강화하고 신라면 데이, 신라면 키친카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다. 동남아 국가에서도 현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특히 농심은 올해 미국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된다. 지난해 12월 LA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봉지면 2개 라인, 용기면 4개 라인으로 용기면 중심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농심은 신라면의 브랜드 파워와 촘촘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현지 일본업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심은 일본 토요사이산(46%)과

닛신(30%)에 이어 15%의 점유율로 미국 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심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2%에 불과했지만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빠른 속도로 원조인 일본 라면을 따라잡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한국의 매운맛으로 식품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신라면을 중심으로 라면한류 열풍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머지않아 신라면의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이미 2012년 업계 최초로 해외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2017년 중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 들었으나 지난해 성장세를 회복했다.

오리온은 해외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중국에 생산공장을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베트남과 러시아에 추가로 공장을 지었으며, 국가별로 특화된 제품과 마케팅을 선보였다.

오리온에 따르면 초코파이는 '2019년 중국 고객 추천지수' 파이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에 오르는가 하면,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도 오를 정도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새뜰마을사업'

### 대상지 '농어촌 72곳·도시 30곳' 선정

지붕 개량 등 생활인프라 확충

정부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102개소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농림축산식품부·국도교통부와 함께 농어촌 지역 및 도시지역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로 농어촌 72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개선, 소방도로·상하수도 설치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문화·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소)에 국비 983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사업대상 지구는 ▲전남 21개소 ▲경북 16개소 ▲경남 14개소 ▲충북 10개소 ▲전북 9개소 ▲경기 8개소 ▲강원 6개소 ▲충남 5개소 등이다.

균형위는 '지역과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월 말까지 119개 지역의 사업신청을 받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면·대면·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102개소 지역을 선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 소외돼 생활 격차가 발생한 마을들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이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도 포함했다.

도시지역에서는 기존 인구밀집 지역



이었으나 상권이 쇠퇴하고 거점시설 등이 철수돼 사동화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뽑혔다. 인접한 지역의 개발사업 또는 해당지역 개발 취소로 공간적인 단절이 발생한 곳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과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차량의 교행이 안 되는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가 최우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균형위는 오는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 건설공사 계약액 219兆... 전년比 4.3%↑

공종별 대형 발전소 공사가 20% ↑  
현장 소재지는 수도권이 7.5% ↑

국도교통부는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보다 4.3% 늘어난 21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고, 민간공사는 16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 늘어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강릉·삼척 등 대형 발전소 공사계약에 따라 전년대비 19.9% 증가한 58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건축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0.4% 감

소한 1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순위별로 상위 1~50위 기업이 전년보다 5.2% 늘어난 90조7000억원을 계약했다. 51~100위 기업은 전년보다 15.6% 줄어든 12조6000억원, 101~300위 기업은 4.4% 감소한 18조3000억원을 계약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을 보면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10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5조5000억원으로 2.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비수도권이 92조3000억원으로 7.6%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보다 0.6% 하락한 58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부문과 건축공종 공사가 감소한 영향이다.

공종별로 건축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감소로 4분기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6.1% 줄어든 4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토목은 전년 4분기보다 22.5% 늘어난 13조7000억원이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보다 7.5% 늘어난 29조5000억원, 비수도권이 7.9% 줄어든 28조7000억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비수도권은 24조6000억원으로 2.5% 감소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전자발찌 끊고 도주... 주변 CCTV로 잡는다

대전부터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 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는 피해자 구조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에 즉시 활용된다.

이 시스템 연계는 대전에서부터 시작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국도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도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31일 법무부와 성범죄·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영상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도교통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와 서울시에 각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 경우 위치추적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만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

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국도교통부는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구축할 계획이다.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